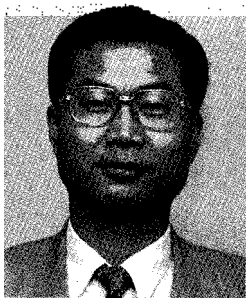


에이즈 정책의 올바른 이해



안종주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

에이즈는 은밀하게 번지는 성병과 한번 걸리면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에이즈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남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전염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벌인 결과, 감염자들은 대부분 부모에게도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자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쩔수 없이 언론에 노출돼 그때부터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감염자의 99%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숨고 싶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를 발견한 의료인은 반드시 보건당국에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에이즈 예방법'은 문제가 있다.

몇 달 전 어느 에이즈 강연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이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부유층이나 상류층으로 보이는 에이즈 감염자와 그 가족들이 간혹 전화를 걸어와 익명으로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를 물어온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가 2중 법정전염병으로 돼있고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자나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익명치료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이웃 일본에 가서 에

이즈 감염여부를 진단받고 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의 달려가 아쉬운 형편인 국제통화기금 국제금융시대에 가까운 외화가 우리의 잘못된 에이즈 관련 법규 때문에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냥 환자의 나이와 성별 정도만 나중에 보건당국에 보고할 뿐 감염자나 환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환자 발생 현황만 보고토록 할 뿐 감염자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에이즈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은 한결같이 에이즈 정책을 바꿀 것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이런 문제점을 뜯어고치기 위해 에이즈를 2중 전염병에서 3중 전염병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뒤늦은 일이지만 잘된 일이다.

그러나 **확방군이** 나타났다. 일부 언론(인)이 정부의 에이즈 정책이 후퇴하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누가 에이즈 감염자인지 모르며 그렇게 될 경우 에이즈가 마구 퍼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어떤 언론은 한술 더떠 에이즈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강제검진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지 않도록 격리시설을 만들어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국내 에이즈 전문가들과 에이즈 관련단체들이 한결같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소린가. 국내 웬만한 에이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12월 1일 제10회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때 있었던 에이즈 예방 강연에서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언론에 자세한 자료를 모두 나눠줬다. 전문가들은 강연회에서 한 결같이 에이즈 강제검진은 실효성이 낮으며 인권차원에서든 문제가 있으므로 이른 시일안에 대상을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강제검진 대상을 늘리라고 요구하거나, 법정전염병을 3종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은 적어도 이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서는 전문가와 에이즈 단체들이 강제검진 대상을 늘리고 보다 특별관리를 강화하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런 보도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미친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라면 왜곡 허위 보도에는 무대응이 상책이다. 물론 이런 보도를 한 언론에게 정정 기사를 내도록 할 수 있겠지만 대개 이런 보도를 하는 기자나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일 리는 없겠지만……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을 끄는 에이즈 문제는 쉼터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당시 에이즈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이 원하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쉼터였다.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2억원 을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에 배정해 98년부터 민간단체를 지원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 쉼터는 에이즈 감염자들이 그야말로 쉬어가는 곳이 돼야 한다.

- 보건당국은 이런 보도에 대해 전혀 관심을
- 기울일 필요가 없다. '미친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라면
- 왜곡 허위 보도에는 무대응이 상책이다.
- 물론 이런 보도를 한 언론에게 정정 기사를
- 내도록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쉼터는 이들이 함께 숙식하며 살아가는 생활공간 구실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쉼터 운영은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어려울 게 틀림없다. 결국 쉼터는 에이즈 감염자들이 모여 정보도 교환하고 동병상련하며 상담하는 공간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쉼터의 운영주체로는 종교단체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 에이즈 예방단체를 꼽을 수 있다. 에이즈 감염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몸이 몹쓸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해 망가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병든다.

이들에게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자비와 사랑, 출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가장 잘 보살필 곳은 뉘너해도 종교단체일 것이다.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미 사회·국가문제가 되고 있는 태국에서는 불교사원이 쉼터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많은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이 도시 곳곳에서 에이즈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종교단체와 더불어 사회봉사단체와 에이즈 관련 단체들도 에이즈 감염자를 돌보는 데는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이즈 관련단체에서는 평소에도 에이즈 관련 상담을 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자들의 심리상태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에이즈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의 쉼터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누가 또는 어느 기관이 쉼터를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언론 (또는 국민)에 달려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에이즈 감염자의 쉼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쉼터의 위치 따위를 알릴 경우 낭패다. 쉼터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추진해야 하며 미리 언론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아직 에이즈에 관해 편견 투성이인 언론의 비뚤어진 보도 태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의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기 힘들다.

언론이 바로 서는 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에이즈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는 것은 언론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독자·시청자이며, 감시자인 국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민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뭇은 에이즈 예방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